

# 참사 피해 화정아이파크 입주민 두번 울리는 '민원'

8개 전체 동 해체공사 진행 중  
소음·비산먼지·낙하물 문제 삼아  
주말 제외 거의 매일 1건씩 제기  
민원처리·공무원 응대 작업중단  
입주자들 "공사 지연 원치 않아"

"수백 명이 입주만 기다리고 있는데... '막무가내' 민원 때문에 2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봉고 참사가 벌어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1년 가까이 '무리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해체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안식처를 되찾고 싶은 예비입주자들은 '악성 민원'이 입주 지연을 초래한다고 토로했다.

24일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따르면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8개 전체 동에 대한 해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별로는 지난 21일 기준 △101동 37층 중 18층 △102동 28층 중 18층 △103동 38층 중 20층 △104동 37층 중 20층 △201동 39층 중 21층 △202동 28층 중 11층 △203동 38층 중 18층 △204동 26층 중 18층이 철거 중이다.

문제는 '민원'이다. 공사 현장 인근 상인 등이 해체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낙하물 등을 문제 삼아 주기적으로 서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 직원들은 수시로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공무원들을 응대하면서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24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해체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화정아이파크 철거 공사 현장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총 188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146건이 접수됐다. 올해 △1월 14건 △2월 16건 △3월 12건씩 발생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1건씩 민원이 들어오는 셈이다. 이중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비산먼지 개선명령 단 1건이다.

최근에는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경찰에

게까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28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보행자 통행 방해한다', '사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게이트 1곳을 막아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폐기물 차량이 10대 미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게이트를 폐쇄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5년 동안 보행자 사

고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층이 허물어지고 저층 해체가 시작되면 민원은 더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입주자들은 공사 지연으로 입주일이 늦춰질까 불안에 떨고 있다.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는 "공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매일 현장을 방문한다. 그때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항의 받고 있는 모습을 본다"며 "심지어 공무원을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 경찰을 부르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들도 분명 피해를 봤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악의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입주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공사가 지연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토로했다.

민원인 대다수는 현산과 피해보상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 현재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인근 상가 주민들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선 '의도가 있는 민원'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현산은 봉고 참사 인근 상가 87개 점포 중 80개 점포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합의했다. 나머지 7개 점포는 협의에 실패해 피해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다. 협의 실패 원인에 대해 미합의 상인들은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하고 있지만 현산 측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산 관계자는 "철저하게 준비한 안전 해체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계획에 의거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하지 않아 합의를 할 수 없다"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 이후에도 미합의 상인들과 만나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기존 합의한 상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속히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던 화정아이파크는 붕괴 참사로 철거·재시공을 거쳐 오는 2027년 이후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 주월동 주택조합 재판 2심도 장기화 조짐... 갈길 먼 피해 구제

사기·변호사법 위반 1심만 4년  
2심 첫 재판서 피해자들 하소연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이죠."

재판지연과 서면구형 등 숱한 논란을 낳은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년째 진행 중인 형사재판(본보 2023년 6월28일자 4면)

이 2심에서도 재판 장기화를 예고했다.

제2형사부(항소) 김영아 재판장은 24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재판을 202호 법정에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주월 주택조합의 전 감사 등 3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르지 않은 증인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5월22일 추후 재판 일정을 잡았다.

증인 채택 여부를 심의하고, 채택된다면 또 추가로 재판기일을 잡아 재판한다는 것이다. 이 재판은 지난 2월7일 1심 선고가 난 후 2개월 만에 열렸는데, 증인신문과 기일변경 등을 고려하면 2심도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부터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피해자인 지역주택조합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구현철 유동지역주택조합 이사는 "재판이 길어지면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

에 가입할 수 없고, 일반 분양도 못 받는다"며 "만약 이 돈을 A씨에게 못 받으면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남구 주월동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승인을 위해 공무원과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가량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는

주월동 재개발 사업 관련, 사업계획 심의 승인 등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시·구의회, 법조계 등 지역 내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행사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로비와 공무원 승진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3억 3845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송민섭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